

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안 번호	5048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4. 10. .

제 출 자 : 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공무상 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적과의 교전 등으로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에 해당하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그 지급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,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재해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하며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드는 비용뿐만 아니라 인사혁신처장이 재해예방 및 공무원 재활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각종 지원 사업에 드는 비용까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,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이 아닌 공무원도 군인·경찰·소방의 직무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이 된 것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을 순직군경으로 보아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순직군경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4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 분쟁지역 등에서 「국가정보원법」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 수집

나. 방첩 활동

다. 「국가정보원법」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응조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

제16조제2항 중 “「국세징수법」”을 “「국세징수법」에 따른 강제징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중 “채납처분”을 각각 “강제징수 또는 채납처분”으로 한다.

제18조제1항 단서 중 “「국세징수법」, 「지방세징수법」,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채납처분”을 “「국세징수법」에 따른 강제징수나 「지방세징수법」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채납처분”으로 한다.

제39조제3항 중 “제5조제1호나목에 따라 대간첩 작전 수행 중 입은 재해로 인하여”를 “대간첩 작전 수행, 적과의 교전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한 사망이나 무장폭동,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”로 한다.

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이하 이 조에서”를 “이하”로, “수립·추진할 수 있다”를 “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실시할 수 있다”를 “실시하여야 한다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인사혁신처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책의 수립·추진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.

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6조의2(공무원의 책무) 공무원은 재해예방을 위하여 제46조의3제5항에 따른 건강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, 이 법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.

제46조의3(건강안전관리체제 등)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재해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건강안전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.

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강안전책임관을 보좌하여 해당 기관의 재해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건강안전담당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.

③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(이하 “건강관리의 등”이라 한다)을 각각 배치할 수 있다.

1. 건강관리의: 공무원의 건강관리 업무와 건강지도관을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

2. 건강지도관: 건강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건강안전책임관을 보좌하고 건강안전담당관에게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

3. 안전지도관: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건강안전책임관을 보좌하고 건강안전담당관에게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

④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건강관리 의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·법인 또는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강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.

1. 기관 내 건강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조직과 그 직무 및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

2. 위험요인 진단 및 조치, 재발방지 대책 등 기관 내 건강 및 안전 관리 방법

3.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소속 공무원 의견 청취 절차

4. 재해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재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⑥ 제1항·제2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강안전책임관·

건강안전담당관의 업무·자격·지정 및 건강안전관리규정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6조의4(건강안전협의회) ① 인사혁신처장은 건강 및 안전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, 정보 교류 및 관련 기관 간 협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강안전협의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건강안전협의회는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건강안전 책임관으로 한다.

③ 건강안전협의회는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차장으로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강안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6조의5(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인사혁신처장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무원 건강 및 안전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1. 공무원 건강 및 안전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
2. 공무원 재해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
3. 공무원 건강 및 안전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
4. 공무원 재해예방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
5. 공무원 건강 및 안전 관련 시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인사혁신처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공무원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연도별 계획(이하 “연도별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고,

이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에 따라 매년 공무원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④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난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및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매년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⑤ 인사혁신처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을 평가하여 공표할 수 있으며, 소속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.

⑥ 인사혁신처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해예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·연도별계획·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, 추진실적·시행계획의 평가·공표, 개선 권고 조치 및 실태조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6조의6(공무상 재해 통계)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재해예방 및 재활을 위하여 공무상 재해 현황에 관한 통계를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재해예방 및 재활을 위하여 공무상 재해 현황에 관한 통계를 종합적으로 작성·관리하고 이를 공표할 수

있다.

③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·관리를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6조의7(건강검진 등)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, 수검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강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소속 공무원이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, 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재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③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심리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,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 상담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결과를 공무원의 건강안전 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

⑤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

있다.

제4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재해예방사업 및 제47조제2항에 따른 재할·직무복귀 지원 사업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6조제1항에 따른 재해예방 및 제47조제1항에 따른 재할 및 직무복귀 지원 등을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9조의 제목 “(재해보상부담금)”을 “(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제48조제1항”을 “제48조제1항 및 제2항”으로, “재해보상부담금”을 “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전단·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“재해보상부담금”을 각각 “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”으로 한다.

제50조 전단 중 “재해보상부담금”을 “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”으로 한다.

제59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군인·경찰·소방의 직무에 준하는 직무 수행으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이 된 것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

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을 순직군경으로 보아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제2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.

제61조제1항제4호 중 “결손처분·체납처분”을 “결손처분·강제징수·체납처분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9호 중 “재해보상부담금”을 “재해예방 및보상부담금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“체납처분”을 “강제징수·체납처분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인사혁신처장은”을 “인사혁신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.

1. 제5조제4호의 개정규정: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
2. 제16조제2항·제3항, 제18조제1항, 제39조제3항, 제59조제2항, 제61조제1항제4호 및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: 공포한 날

제2조(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에 관한 적용례 등)

- ① 제5조제4호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전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- ② 2024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제5조제4호 각 목에 따른 직무를

수행한 국가정보원 직원의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 해당 여부에 관하여는 제5조제4호 각 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3조(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에 관한 적용례) 제3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사망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.

제4조(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) ① 인사혁신처장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까지 제46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까지 제46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제5조(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에 관한 적용례) 제48조제2항 및 제4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6조(보훈 등의 예우에 관한 적용례) 제5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망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.

제7조(보훈 등의 예우에 관한 경과조치)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사망한 위험직무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에 관하

여는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조(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)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. 1. ~ 3. (생략) 4. 국가정보원 직원이 다음 각 목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 가. 「국가정보원법」 제3조 제1항제3호·제4호에 따른 직무 나. 간첩 체포 및 방첩 활동 다. 분쟁지역 등에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 등 보안 정보 수집 5. ~ 11. (생략) 제16조(급여의 환수 등) ① (생략) ② 인사혁신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급여를 환수할 때에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	제5조(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)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 ----- -- 가. 분쟁지역 등에서 「국가정보원법」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 수집 나. 방첩 활동 다. 「국가정보원법」 제4조 제1항제3호에 따른 대응조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5. ~ 11. (현행과 같음) 제16조(급여의 환수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

하면 「국세징수법」 또는 「지방세징수법」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.

③ 인사혁신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급여를 환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와 제3호의 경우에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.

1.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

2. 3. (생략)

제18조(권리의 보호)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,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. 다만,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, 「국세징수법」, 「지방세징수법」,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체납처분

--- 「국세징수법」에 따른 강제징수 -----

-----.

③ -----

-----.

----- 강제

징수 또는 체납처분-----

1.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----

2. 3. (현행과 같음)

제18조(권리의 보호) ① -----

-----.

----- 「국세

징수법」에 따른 강제징수나

「지방세징수법」 및 그 밖의

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39조(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)

①·② (생략)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호나목에 따라 대간첩 작전 수행 중 입은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로 한다.

제46조(재해예방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상 재해의 예방(이하 이 조에서 “재해예방”이라 한다)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·추진할 수 있다.

1. ~ 4. (생략)

② 인사혁신처장은 재해예방 관련 시책을 종합적·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

법률에 따른 체납처분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39조(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)

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대간첩 작전 수행, 적과의 교전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한 사망이나 무장 폭동,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-----
--.

제46조(재해예방) ① -----

---이하 -----
-----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~ 6.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---- 실시하여야 한다.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③ 인사혁신처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책의 수립·추진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.

제46조의2(공무원의 책무) 공무원
은 재해예방을 위하여 제46조의
3제5항에 따른 건강안전관리규
정을 준수하여야 하며, 이 법에
따른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에
따라야 한다.

제46조의3(건강안전관리체제 등)
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
장은 해당 기관의 재해예방 업
무를 총괄하는 건강안전책임관
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
여야 한다.

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
장은 건강안전책임관을 보좌하
여 해당 기관의 재해예방 업무
를 담당하는 건강안전담당관을
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할 수
있다.

③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

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(이하 “건강관리의등”이라 한다)을 각각 배치할 수 있다.

1. 건강관리의: 공무원의 건강관리 업무와 건강지도관을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

2. 건강지도관: 건강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건강안전책임관을 보좌하고 건강안전담당관에게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

3. 안전지도관: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건강안전책임관을 보좌하고 건강안전담당관에게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

④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건강관리의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·법인 또는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

<신 설>

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
된 건강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
여야 한다.

1. 기관 내 건강 및 안전 관리에
관한 조직과 그 직무 및 예산
확보에 관한 사항

2. 위험요인 진단 및 조치, 재발
방지 대책 등 기관 내 건강 및
안전 관리 방법

3.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사항에
대한 소속 공무원 의견 청취
절차

4. 재해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재해예방에 필요한
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
하는 사항

⑥ 제1항·제2항 및 제5항에서
규정한 사항 외에 건강안전책임
관·건강안전담당관의 업무·
자격·지정 및 건강안전관리규
정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
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6조의4(건강안전협의회) ① 인
사혁신처장은 건강 및 안전 관
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, 정보
교류 및 관련 기관 간 협의 등

<신 설>

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강안전협의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건강안전협의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건강안전책임관으로 한다.

③ 건강안전협의회의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차장으로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강안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6조의5(기본계획의 수립 등)

① 인사혁신처장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무원 건강 및 안전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1. 공무원 건강 및 안전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

2. 공무원 재해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

3. 공무원 건강 및 안전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

4. 공무원 재해예방 관련 홍보

에 관한 사항

5. 공무원 건강 및 안전 관련 시
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

6. 그 밖에 공무원의 건강 및 안
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
항

② 인사혁신처장은 기본계획에
따라 매년 공무원 건강 및 안전
에 관한 연도별 계획(이하 “연
도별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
시행하고, 이를 국가기관 및 지
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
야 한다.

③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
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에
따라 매년 공무원 건강 및 안전
에 관한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
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
여야 한다.

④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
장은 지난해의 시행계획에 따른
추진실적 및 다음 해의 시행계
획을 매년 인사혁신처장에게 제
출하여야 한다.

⑤ 인사혁신처장은 제4항에 따
라 제출받은 추진실적 및 시행

<신 설>

계획을 평가하여 공표할 수 있으며, 소속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.

⑥ 인사혁신처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해예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·연도별계획·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, 추진실적·시행계획의 평가·공표, 개선 권고 조치 및 실태조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6조의6(공무상 재해 통계)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재해예방 및 재활을 위하여 공무상 재해 현황에 관한 통계를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재해예방 및 재활을 위하여 공무상 재해 현황에 관한 통계를 중

<신 설>

합적으로 작성·관리하고 이를
공표할 수 있다.

③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 따
른 통계의 작성·관리를 위하여
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
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
있으며, 요청받은 국가기관 및
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
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계
의 작성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은
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6조의7(건강검진 등) ① 국가
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
소속 공무원이 「국민건강보험
법」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
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, 수검
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
장은 건강에 장애가 발생할 우
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소
속 공무원이 업무적 특성을 고
려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
록 지원하고, 검진 결과를 바탕
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
따라 업무재배치 등 필요한 조

제48조(비용부담의 원칙) ① (생략)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재해예방사업 및 재
활·직무복귀 지원 사업에 드는
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<신 설>

치를 하여야 한다.

③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
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심리검사
를 실시할 수 있고, 검사 결과를
바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바에 따라 전문가 상담 지원 등
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
항 및 제3항에 따른 결과를 공
무원의 건강안전 보호 및 유지
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
된다.

⑤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기관 및
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부
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
치를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
지원할 수 있다.

제48조(비용부담의 원칙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6
조제2항에 따른 재해예방사업
및 제47조제2항에 따른 재활·
직무복귀 지원 사업에 드는 비
용을 부담할 수 있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6
조제1항에 따른 재해예방 및 제

제49조(재해보상부담금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48조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(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재난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제외한다. 이하 “재해보상부담금”이라 한다)은 재해발생률,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재해보상부담금은 공단에 내야 한다. 이 경우 재해보상부담금의 납입절차, 정산 및 징수 등에 관하여는 「공무원연금법」 제71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하되, “연금부담금등”은 “재해보상부담금”으로 본다.

③ 재해보상부담금으로 이 법에 따른 급여(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재난부조금과 사

47조제1항에 따른 재할 및 직무복귀 지원 등을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9조(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) ① ----- 제48조제1항 및 제2항-----

-----재해예

방및보상부담금-----

----.

② -----

----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-----

-----.

----- 재해예방

및보상부담금-----

----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-----.

③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-----

망조위금은 제외한다)에 드는
비용의 지출을 충당할 수 없을
때에는 「공무원연금법」에 따
른 공무원연금기금에서 일시 차
입할 수 있다. 이 경우 일시 차
입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
에 따라 이자를 가산하여 다음
다음 회계연도 말까지 상환하여
야 한다.

제50조(공무원연금액의 이체) 인
사혁신처장은 순직공무원 또는
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유족이
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
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
직유족연금을 선택하여 퇴직유
족연금,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
는 퇴직유족일시금을 지급하지
아니한 경우 그 지급하지 아니
한 금액은 다음다음 회계연도의
재해보상부담금 재원으로 이체
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순직공무
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
유족이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
직무순직유족연금을 받는 경우
로서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
가 있을 때에는 퇴직유족연금은

-----.

-----.

제50조(공무원연금액의 이체) --

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 -----

-----.

그에 상응하는 퇴직유족연금일
시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체
할 금액을 산정한다.

제59조(보훈 등 예우) ① (생 략)

② 위험직무순직공무원과 그 유
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
른 예우를 할 수 있다.

1. 2. (생 략)

3.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
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
따른 재해사망군경과 그 유족
에 대한 예우

4.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
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3호에
따른 재해사망공무원과 그 유
족에 대한 예우

③ · ④ (생 략)

<신 설>

-----.

제59조(보훈 등 예우) ① (현행과
같음)

② -----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<삭 제>

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
⑤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
고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
이 아닌 공무원이 군인·경찰·
소방의 직무에 준하는 직무 수
행으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이
된 것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
하는 경우에는 그 위험직무순직
공무원을 순직군경으로 보아

<p>⑤ (생략)</p> <p>제61조(업무의 위탁) ① 인사혁신처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단에 위탁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제16조에 따른 급여의 환수 및 <u>결손처분·채납처분</u></p> <p>5. ~ 8. (생략)</p> <p>9. 제49조에 따른 <u>재해보상부담금</u>의 산정·정산 및 징수관리 등에 관한 사항</p> <p>10. (생략)</p> <p>② 제1항제4호에 따라 공단이 <u>채납처분</u>을 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공단의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.</p> <p>③ <u>인사혁신처장</u>은 제46조제2항에 따른 재해예방사업과 제47</p>	<p><u>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제2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.</u></p> <p>⑥ (현행 제5항과 같음)</p> <p>제61조(업무의 위탁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</p> <p>-- <u>결손처분·강제징수·채납처분</u></p> <p>5. 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9. ----- <u>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 <p><u>강제징수·채납처분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. -----</p> <p>-----.</p> <p>③ <u>인사혁신처장</u>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-----</p>
---	---

<p>조제2항에 따른 재할 및 직무복 귀 지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④ ~ ⑥ (생 략)</p>	<p>----- ----- -----.</p> <p>④ ~ ⑥ (현행과 같음)</p>
---	---

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- 제39조제3항 (위험직무순직유족 보상금)	○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를 지급하는 위험직 무순직유족보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 (기존: 경찰공무원의 대간첩작전 수행으로 순직시 → 개정: 공무 원이 군인 전사에 해당하는 직무로 순직시)
2	- 제46조의7 (건강검진 등)	○ 국가기관 및 지자체장은 소속 공무원의 일반 건강검진, 심리검 사 및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그 결과에 따 라 조치 ○ 인사처는 국가 및 지자체의 건강검진 등을 지원하거나 기타 예방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
3	-제48조 (비용부담의 원칙) -제49조제1항 (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)	○ 재해보상부담금의 용도에 재해예방 사업 및 재할·직무복귀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으로 확대 개편
4	-제59조제5항 (보훈 등 예우)	○ 경찰·소방 외 위험직무순직공무원도 순직의 계기가 된 직무수 행이 군인·경찰·소방의 직무에 준하는 경우 「국가유공자법」에 따 른 순직군경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- 제39조제3항 (위험직무순직유족 보상금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- 제46조의7 (건강검진 등)	
3	- 제48조 (비용부담의 원칙)	

	-제49조제1항 (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)	
4	- 제59조제5항 (보훈 등 예우)	

2. 상세 사유

- (안 제39조)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를 지급하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, 추계를 위해서는 청구 건수 등이 예측되어야 하나, 현재까지 해당 규정으로 심사청구 및 지급된 사례가 없어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
- (안 제46조의7)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의 일반 건강검진, 업무상 심층건강검진, 심리검사 등을 지원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, 지원 및 조치 사항은 각 기관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기관 운영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현 시점에서 추계가 곤란
- (안 제48조, 제49조) 재해보상부담금의 용도에 공무원 재해예방사업 및 재할·직무복귀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으로 확대 개편하는 것으로, 부담금 규모는 매년 예산 편성 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현 시점에서 추계가 곤란
- (안 제59조) 경찰·소방 외 위험직무순직공무원도 순직의 계기가 된 직무수행이 군인·경찰·소방의 직무에 준하는 경우 「국가유공자법」에 따른 순직군경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, 추계를 위해서는 청구 건수 등이 예측되어야 하나, 현재까지 심사청구 사례 및 구체적인 정보를 확보하기 곤란하여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

Ⅲ. 부대의견 : 해당 없음

Ⅳ. 작성자

○ 성명

주무관	사무관(서기관)	과장	실장·국장
권창욱	이재원	구혜리	김정연

○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재원	044-201-8134	jw1123@korea.kr